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임원 10여명이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투자 강요와 관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 “1000만원 빛 떠넘기는 美 요구, 즉각 멈춰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美, 한국에 470조원 ‘투자의 탈 쓴 갈취’ 요구 국가 신용 흔들고 외환 위기 재현 우려”... 정부에 단호한 대응 촉구

최근 미국의 관세 통상 압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즈음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 소속 임원 10여명이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투자 강요와 관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노골적인 갈취와 기만적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조지훈 대표가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한국에 USD 3,500억,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채와 수익 배분을 독점하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표면상 ‘투자’일 뿐, 실상은 ‘노골적인 갈취’이자 ‘투자의 탈 쓴 기만적 사기극’”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이 요구가 외화보유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규모이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빛을 떠넘기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를 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독일의 베르사유 배상금보다도 가혹한 조건이라며 “한국의 공간을 일방적으로 약탈하려는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미국의 반주권적 요구”로 판단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담, 담,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 ‘삼중 압박’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강요하는 행태는 “명백히 주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경제제 패권”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혁신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 △협상 과정 국민 공개 및 자본

유출 안전장치 마련 △국회 동의와 국민 합의를 통한 위기 극복 △국민과 기업의 투자 결정권 및 법적 권리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에는 “스스로 강조해 온 자유시장과 공정경쟁의 가치를 지켜, 불공정한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미국이 부당한 강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요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불공정한 청구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하며, 모든 전북도민이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끝까지 지키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임원진은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 책임자이며, 차후 또 다른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 “생명 위협하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해야”

백지화 공동행동, 항소 철회 촉구... “법원 판결대로 ‘조류충돌 위험’ 간과 말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 회원 30여명이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1심 패소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의 항소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활용률 0.8%에 불과한 전쟁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닌 혈세만 탕진할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신공항이 미군의 영향을 받는 독립 불가능한 민간공항이자, 전북도가 스스로도 비활성화를 인정한 공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으로 인간 생명권 침해 우려를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거짓과 망상에 기대어 생명권 위에 소수 토건 자본의 이윤을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동행동은 “생명을 죽이는 생태 학살 사업은 기후 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토부와 전북도가 명분 없는 항소를 즉각 취하고 소중할 수라 갯벌을 보존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 30여명이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1심 패소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의 항소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폭력’이라는 규탄과 함께, 근거 없는 개발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정정 · 반론 보도문 결정 1%대에 불과

# 제 역할 못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2018년 이후 이의신청 610건 중 정정 6 · 반론 게재 2건에 그쳐 제20대 대선 등서 총 451건 이의신청에 정정 · 반론 한 건도 없어 한병도 의원 “제재 수위 강화 등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 · 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 · 반론 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

/이만호 기자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글로벌 배터리시장 우위 선점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 절실”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 생산보조금 도입 등 제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제출한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전기차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안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건 협의 과정에서 그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단일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이차전지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법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월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10여 개,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관련 실 · 국장들과 이차전지산업 육성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4개 공구에 위치해있으며,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가공 및 리사이클링을 담당하고 있다. 23개사에서 9.3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9개사가 가동중이고 6개사가 건축중이며 5개사가 입주계약을,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 3개사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3일, 제27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 의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남원시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국지도 제60호선(인월~산내) 및 국도 제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 및 사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폐회사에서 김영태 의장은 “내일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역 민원 해결 ‘주목’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인근 그늘막 설치 나서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무더위 속 시민 불편을 해결하며 민원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여름 동부노인복지관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더위를 피할 곳이 없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 긴 신호 대기에도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한 이 의원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양쪽에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숙자 의원은 “긴 폭염에 수고해 주신 안전재난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